

기자회견문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

www.usplant.org

○ 10월 17일(월) 배포

○ 총 4쪽

*첨부자료(영상,음성파일 포함)

○ 수신 기자 : 노동/사회/건설 담당 기자

○ 담당자: 윤희정 교육선전국장 (010-4266-1225)

한국석유공사 폭발사고 산재사망 규탄 기자회견

**사람이 죽었는데 사과조차 없는 한국석유공사 · SK건설
노동자는 개·돼지가 아니다! 고인의 영정 앞에 사죄하라!**

※ 기자회견 식순

1. 기조 발언 -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지부장 직무대행 방래혁
2. 연대 발언 -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사무처장 이창규
3. 유가족 발언 - 故 최** 조합원의 가족
4.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제관분회장 김은수,
배관분회장 정훈종

- 기자회견문 -

한국석유공사 · SK건설은 고인의 영정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지난 14일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 울산현장에서 폭발사고로 플랜트-건설 노동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불과 닷새 전, 20대 국감 현장시찰을 하러 온 산자위 위원들 앞에 한국석유공사가 안전을 자신하던 바로 그 자리, 석유공사 비축기지에서 대형사고가 벌어진 것이다.

안전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고가 난 지 나흘이 지났건만, 발주처인 한국석유공사와 원청 시공사 SK건설은 사고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배관 철거를 위해 잔존한 원유찌꺼기를 제거하는 피깅작업 중, 배관 내 잔류가스가 불티 등 원인모를 외부 충격으로 폭발했을 거라는 추정만을 내놓고 있다. 두 명이 사망한 중대재해에 대처하는 모습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안일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잔류가스의 존재다. 그런데 피깅작업을 앞둔 배관에는 가스가 있어서 안 된다. 잔류가스의 존재는 원청 SK건설이 사전에 퍼지(가스제거 작업)·드레인(수압에 의한 클리닝 작업)과 같은 안전 의무작업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드레인·퍼지 작업 등 하청업체에 작업허가를 내리기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안전조치는 원청의 의무이다. 기본의무를 생략할 경우, 이번 같은 대형참사가 일어난다.

그러나 한국석유공사와 SK와 같은 대기업 플랜트 현장에서 기본 안전매뉴얼이 생략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돈 때문이다. 기업은 설비 보수·정비에 드는 비용과 인력을 꾸준히 줄여왔다. 보수 기간을 단축하고, 보수 간격은 늘린다. 발주처로부터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받은 건설업체는 시간 압박에 안전매뉴얼을 생략한다.¹⁾ 결국 사고가 난다.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면, 설비 노후화는 가속화하고 사고는 반복될 뿐이다.²⁾ 그러나 이번 한국석유공사 폭발사고에서 보듯, 공기업조차 안전과 비용을 맞바꾸고 있다.

게다가 당시 사고 배관의 브라인드(배관 밀폐 뚜껑)는 검사를 위해 개방된 상태였다. 가

1) 제조업의 수선비(설비보수·정비 비용 등 포함)는 지난 14년 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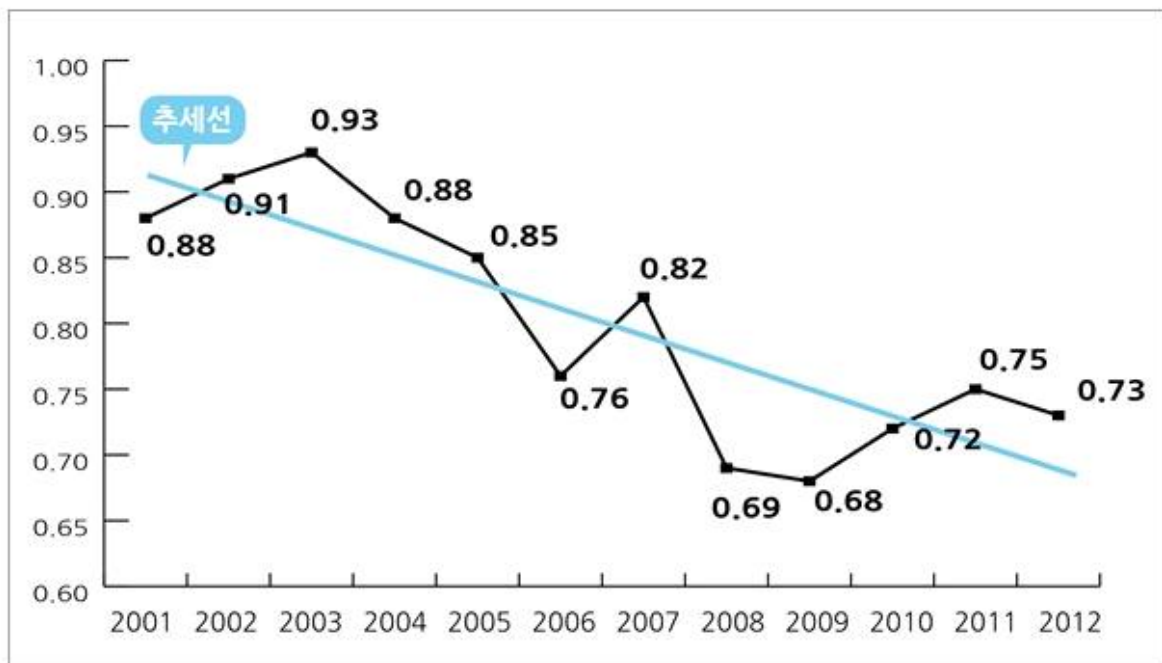
스가 잔존해 언제든 폭발할 위험이 있는, 심지어 열린 배관 주변에 노동자들을 방치했다. 원청의 안전관리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원청 SK건설은 법적으로 명시(산안법 제 29 조. 도급사업시 안전보건조치)된 안전관리감독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 모든 책임을 결코 피해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

돈은 원청이 벌고, 위험은 노동자가 져야 하는가.
한국석유공사와 SK건설이 사고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공기업 한국석유공사와 대기업 SK건설이 사고 원인을 두고 머리를 흔들며 진실을 내놓지 않는 이 순간에도, 고인은 영안실에서 차디차게 식어가고 가족들은 오염한다. 심지어 기업과 경찰의 안일한 처리로 인해 시신이 바뀌는 일까지 벌어졌다. 유족들은 더이상 경악할 힘조차 없다.

그런 유가족에게 한국석유공사와 SK건설은 사과 한마디 않는다. 사고 당일,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사장은 국정감사 도중 울산을 방문했다고 한다. 그러나 유가족은 한국석유공사 말단직원 얼굴 한 번 본 적 없다.

공기업이 발주하건, 대기업이 공사를 주관하건 간에, 건설현장 하청의 하청 일용직 플랜



▲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선비 비중(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추이 <단위: %>(출처: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년도)

2) 울산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울산지역 석유화학공단에서 197건의 폭발과 화재 사고가 발생. 48명의 사상자(사망 5명)가 났다.

트 노동자의 목숨은 파리목숨이다. 죽어도 사고의 원인을 알려주는 이도, 사과하는 이도, 책임지는 이도,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이도 없다. 개 값 치루 듯 보상금만 오간다. 돈 벌러 왔으면 죽어도 되는가. 죽어 그런 취급을 받아도 되는가.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이 보수/정비한 사고현장 설비는 한국석유공사의 소유다. 플랜트 설비를 신설·정비하여 가장 큰 이윤과 이득을 보는 이도 원청이다. 그런데 왜 목숨을 내놓는 위험은 노동자가 져야 하는가.

사고를 예방할 자본력과 권한, 즉 안전을 관리할 능력은 초대형 기업인 원청에게 있다. 안전의 책임은 원청이 질 수 밖에 없으며, 져야 한다. 고로 노동자의 죽음의 실질적인 책임은 원청의 몫이다. 정부도, 기업도 더는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아라! 실질적 책임자인 발주처와 원청이 뒤로 숨는 것을 용인하지 마라.

사고의 근본 원인과 사용자의 진짜 책임이 은폐될수록, 문제는 재발된다. 온산에 위치한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는 지역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지역주민으로부터도 안전에 대한 불신을 받는 현장이다. 이번 폭발사고를 제대로 짚고 가지 않는다면, 사고는 언제든 반복된다. 이미 한국석유공사는 유사한 폭발사고로 2003년 4명, 2009년에 8명의 사상자를 냈다. 더 큰 참사가 나지 말라는 법 없다. 플랜트건설 노동자들뿐 아니라, 지역민들까지 죽일 셈인가.

더 큰 참사를, 또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해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한국석유공사, SK건설은

폭발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유가족 앞에 내놓아라! 머리 숙여 사죄하라!
노후설비 점검 등 안전 비용 확대를 약속하라!
플랜트건설 노동자들과 지역주민 앞에 재발방지 계획을 제시하라!

정부과 검경은

중대재해 산재사망의 원청 책임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하라!
올해만 몇 번째 죽음인가! 온산국가공단, 울산석유화학공단 등 울산지역 산단에 대한 안전점검을 즉각 실시하라!